

해외 경험을 통해 살펴본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8월 12일 현재까지 337개 노조가 설립신고를 마쳤다. 적지 않은 노조가 기존 노조로부터 분리되어 나오 고, 일부 무노조 기업의 신규 조직화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조합원수 10명 이하의 소수 노조가 167곳에 달한다고 한다.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은 미가맹 노조 가 86%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립신고 건수와 무관하게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 혹은 조직 적 기반을 갖고 노조가 분리된 경우보다는 자생적인 조직 분화나 단순한 헤게모니 다툼, 혹은 회사의 음성적 지원을 받는 조직의 분리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사례 중 일본의 1950~1960년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좌파성향의 기존 노조를 대체한 제2 노조들의 등장은 일본형 기업별 노사협조주의의 중요한 조직적 토대가 되 기도 하였다.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는 역사적 맥락이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무척 다르다. 일본 을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이념과 정치적 지향이 복수노조 분리의 중요한 요인 이 된 바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분리 정립 이후 이렇다 할 이념적 분할선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존 경계가 흐릿해진 측면도 있다. 더욱이 양대 노총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미가맹 노조들이 급증(2005년 9만 3천여 명 → 2009년 31 만 2천여 명)하고 있는 현상은 노동운동이 자기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단순한 이익단체로 전

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불과 40여 일이 지난 시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선부를 수 있다. 노동정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은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노-시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혹은 예정되어 있는 입단협이 마무리된 이후 다음 입단협을 겨냥한 조직 경쟁이 활발히 전개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온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의 경험은 다수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을 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이러한 혼란은 상당한 정도로 억제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신에 입법자들이 얻고자 했던 산업평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교섭과 관련한 어떠한 제도적 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영국과 일본에서 나름대로의 교섭 질서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우려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일러준다.

물론 세계 어떤 나라도 ‘금지에서 허용으로’라는 제도적 변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는 그야말로 참조용으로만 쓰여야 한다. 그런데 미국, 일본, 영국 사례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의 발전기 혹은 변성기에는 복수노조 틀이 추가 조직화나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쇠퇴기 혹은 침체기에는 오히려 사용자들의 노조 억압 혹은 약화 전략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운동의 변성기인가, 침체기인가? 독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은 그만큼 노조활동과 노사관계에서도 양극화와 분화가 현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라진 틈들을 비집고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태동하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에서 과도기는 얼마나 길 것인지, 과도기적 혼란은 어느 정도일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다. 노와 사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와 근로감독조직 등 정부와 언론 등이 나서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면서 노사관계 시스템의 결과로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이다. **KLI**